



소신있는 시장
활력있는 부산

노무현

기호
2
민주당

이것만은 꼭 해내겠습니다

행정개혁 –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입니다.

교통, 지역경제, 환경, 교육, 복지, 도시안전... 모두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의 행정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의 행정은 달라집니다.

책임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책임행정 – 행정이 풀지 못했던 이제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속시원히 풀어나갈 것입니다.

1. 깨끗한 행정

지난 대구시의 가스폭발사고와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리고 부산의 기우뚱 아파트!

모두 부정과 부패, 무책임한 행정 때문입니다.

행정이 깨끗해지면 부실 공사도 가스 폭발도 없습니다.

예산의 낭비도 세금 도둑질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부정부패와 대형사고를 막아내는데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2. 공정한 인사

부산시 공무원 61%는 중앙의 실권자들이 인사 개입한다고 합니다.

낙하산 인사는 일선 공무원들의 희망과 의욕을 잊게 하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능력을 인정하고 성실이 우대받는 공정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 실세들의 청탁을 거절하는 소신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3. 행정의 생산성 향상

행정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면 먼저, 일선에서 일하는 현업 부서를 우대하고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행정기구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되돌아 가는 2배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공무원도 1.5배 더 일해야 합니다.



참여행정 – 민주행정의 기본입니다.

자치시대의 주인은 부산 시민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고 행정은 합리적이고 탄력있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1. 정보공개

부산시 행정을 부산 시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알리겠습니다.

2. 시민참여

행정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공섬, 항만매립과 같은 중요한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부산이 발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1. 제도로 풀어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돈을 얻어오면 얼마나 얻어오겠습니까. 친하다고 빼좋다고 여당 시장이 중앙 예산을 더 가져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을 국회에서 고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지방정부와 손잡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 야당시장이 풀어야 합니다.

한정된 중앙 예산을 부산에 더 배정하려면 여론과 언론, 야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일은 역시 야당시장이라야 합니다. 야당시장이라야 당당하게 요구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살림을 잘 살아야 합니다.

행정 학자들의 연구 결과, ‘낭비를 줄이면 1년 예산 중 10%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0%의 절반인 5%만 줄여도 우리 부산시 예산에서 1500억원은 남습니다. 인공섬 만든다고 125억원, 기우뚱 아파트 주민 보상에 100억원 등… 알뜰한 시장이 운영하는 부산에는 이런 예산 낭비는 없습니다. 알뜰한 시장이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행정

이제 행정은 지시, 통제, 간섭이 되어선 안됩니다. 시민들의 사업과 생업, 일상생활 곳곳에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끊임없이 개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승진 기회에서 소외되어왔던 청소, 환경, 복지 등 현업 부서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사기와 창의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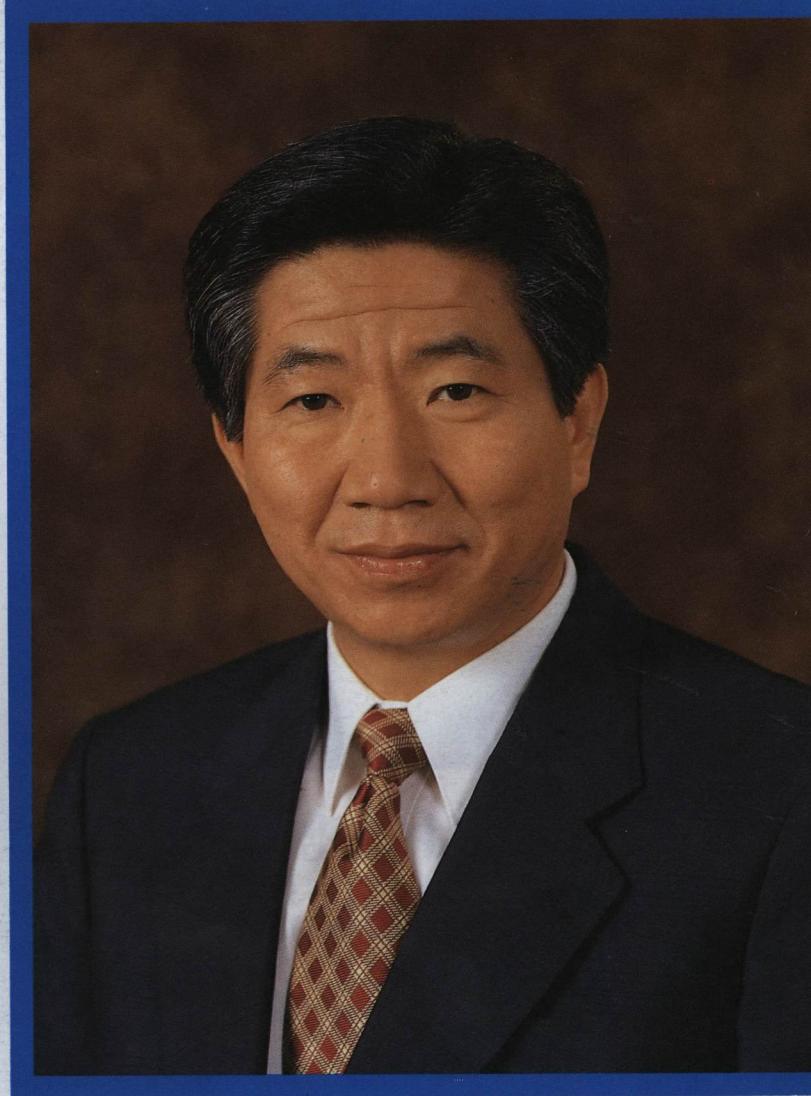
부산이 달라지려면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참여!

투표에 참여합시다 찍어야 달라집니다

- 46년 8월 5일생(당 50세)
- 진영국민학교 – 중학교 졸업
- 부산상고 (53회) 졸업
-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대전지방법원 판사
- YMCA 이사
-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 공혜문체연구소 이사
-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6월항쟁)
- 제 13대 국회의원 (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 국회 5공비리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 민주당 최고위원
- (현) 민주당 부총재
- (현) 민주당 부산광역시지부장 – 동구지구당위원장
- (현) 사단법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 (현) 부산지역정책연구소 이사장

• 이 인쇄물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것임
• 제작자: 후보자 노무현(민주당)
• 인쇄소: 인출연(주소/부산광역시 중앙동 4가 37-5, 전화/469-8509)



노무현 선거대책본부/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1-61 통일빌딩 5층
/전화 (051)441-2226~8/팩스(051)441-2229